

특검 “朴 대면조사 일정 유출 없었다”

“박 대통령 측 요구 대부분 수용... 논란의 여지 될 부분 없도록 조율할 계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장소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처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면조사 관련 조율이 다시 진행되

나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전날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누설한 특검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합의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특검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최순실, ‘靑극비문서 들고다녀’

박헌영 K스포츠 과장 탄핵심판 변론 증언 “최, 문체부 예산안 보여주며 기획안 짜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과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 청와대 ‘극비문서’를 들고다녔다고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언했다.

박 과장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되는 문건 몇몇을 보여줬다”며 “문체부 관련된 것도 물론 있고 대통령 순방에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도 군 생활을 청와대 대통령을 지키는 곳에서 근무했다”며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시간표가 극비문서인데 멕시코 순방 등 시간표 등을 저한테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 순방 등 시간표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협력 구상안 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보여주며 업무기확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 들고 와서 준 적이 있는데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2015년 예산안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보여만 주고 참고해서 (인천·하남 등)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든지 K스포츠클럽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최씨가 “어떤 예산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얼마이며 이런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이 “그 예산안을 누구에게 받아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체부에서 받아왔다고만 했다”며 “최씨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영태씨 말로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가져올 수 있으니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문체부 문건을 실제 저한테 주지는 않았고 대신 전부 기억할 수 없어 휴대전화로 찍어 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당, 주말 촛불집회 전원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각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일제히 참석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의로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는 대거 의원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당원들의 참여도 독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대선관에 관심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촛불민심, 탄핵 위기를 우려하는 민심에 적절하지 않으니 이번주에는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참석’이기는 하지만, (힘들 것 같다.) 가능한 전원 참석해달라고 했다”며 “별도의 당 집회는 하지 않고, 참여해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은 “당 중심의 선거 준비를 하자”, “탄핵에 집중하는 당 모습을 보여주자”, “문재인 대선론에 너무 방심하지 말자”, “의총을 자주 열어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우 원내대표가 전했다.

/뉴시스



“친노동정부 수립할 것”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친노동정부를 수립하고,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철수, 촛불집회 불참 가락 “현재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9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11일로 예정된 광화문 촛불집회 불참을 시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상황에서 ‘현재 압박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 탄핵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 주자들은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대선 준비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성한 증인 17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로 채택,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 심리 지연은 물론 기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1일 각각 광화문과 광주 등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뉴시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정호영 · 최은희 · 이해숙 도의원

전북도의회 정호영, 최은희, 이해숙 의원이 “전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영 의원은 “한옥마을만 해도 한해 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한류를 대표하는 지역

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며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고, 14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인재용 기자

‘자진출석’ 최순실, 또 묵비권 행사 이규철 특검보, “특검 질문 내용에 관심 많아”

9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최씨는 그간 특검팀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이날 처음으로 특검팀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다”며 “확인한 결과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질문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관심을 더 관심이 많다고 했는

데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보다 변호인 입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9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특검의 조사에 응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간점으로 돕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가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이후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초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씨 측이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로부터 입학·학점 등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를 체포, 조사했다.

또 이날 일에는 최씨가 정부의 ‘미인바 K타운 프로젝트’에 지인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M사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 알선수혜 혐의로 다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뉴시스

노회찬 “국회 관련 국정농단 진상조사 나서야” “새누리, 재벌 청부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새누리당을 겨냥,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공모로 만들어진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거론,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사법처리,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고 따졌다.

노 원내대표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을 거론,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재벌들의 청부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 의지를 정권 차원에서 보여야 한다”며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며칠 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현재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은 미미하거나 생활임금에 현저하게 밀도는 수준으로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 현행 30%의 합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처리과제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상징인 민18세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민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런 민18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유독 투표권만 못 주겠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벌 편법세습 저지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유류산업발전법 개정 등 2월 임시국회 처리과제로 제시했다.

/뉴시스

바른정당 “황 대행 기간 연장 수용 안하면 특검 연장법 제출”

바른정당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3당과 공조해 특검 연장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고위에서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황 대행은 기간 연장 요청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 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과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이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우리는 박영수 특검이 아직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며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적극 뒷받침해서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朴·김기춘 등 상대 손배소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위한 예술활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법률대응 모임(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9일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문화·예술인의 인격권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

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법인 3곳도 포함됐다.

원고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됐거나 기재됐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사업에 배제당하

다며 원고 461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체 예술인은 1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 액도 1인당 100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분명히 드러나면 최대 100억원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뉴시스